11.24. 국민일보

稅收 의도적 축소발표 아닌가

국민 90.11.24(토)

24일 경제분야질문

▲張慶宇의원(민자)＝91년예산은 일반회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방양여금 1조9천9백66억원까지 합하면 실제 28.6%가 늘어난 팽창예산이 아닌가.

올해도 3조6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등 연4년째 엄청난 규모의 세수초과로 국민들의 조세저항심리가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는 팽창예산비난을 모면하고 추경예산재원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세수추계를 낮게 발표하는 것 아닌가.

도로와 항만의 적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인데 공업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수출화물을 처리할 중간규모의 항만건설계획은 없는가.

부족한 기술기능인력 충원을 위해 수도권의 공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방공과대학및 공단부근에 전문대를 설립해야 하며 제조업설비투자시에는 세액감면을 50%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議政 녹음

▲洪英基의원(평민)＝10대재벌주식의 46.4%가 기업주와 친인척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의 소유이고 지난 3년간 기업주의 소득은 80%가 증가한 반면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41.1%증가에 그치고 있다.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부담을 덜게 하기 위하여 91년도 예산은 경상경제성장률 12.9%의 범위내로 대폭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자본시장의 개방은 조만간 불가피하고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을 그대로 둔채 개방한다면 우리의 자본시장은 외국의 거대한 자본에 의해 완전 점령될 것이다.

미미한 농업구조 조정으로는 UR협상에서 10년의 유예기간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약속대로 92년까지 농어촌발전에 16조원을 투입하려면 92년에 12조7천9백억원을 투입해야 하나 절대불가능한 형편이다.

▲崔戊龍의원(민자)＝주택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등 지역별로,또 규모별로 구분해 전기 수도 도시가스요금등을 차등적용하고 동일가옥이라도 임대주와 세입자에게 이를 차등부과하는 정책을 연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아파트투기를 제약하기 위해 과표의 현실화외에 주택규모에 따른 누진세부과제도의 도입용의는 없는가.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내외적 대처방안,기초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세제지원확대 및 외국업체들의 지적소유권공세를 방어할 종합적 대비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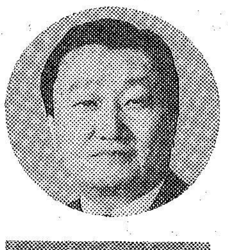
90년 6월말 현재 농수축협을 통해 대출된 농어가의 부채액수는. 영농자금 등으로 대출된 자금이 목적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는데 조사가 돼있나.이제부터라도 농정을 보상정책에서 농업화를 위한 투자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농수축협의 악성부채를 과감히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부재지주의 농지를 현시가로 회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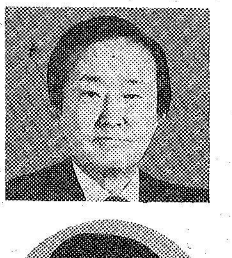
국민漫評 書大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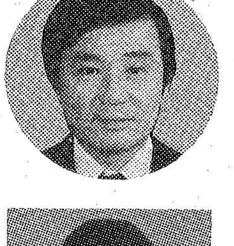
빙글빙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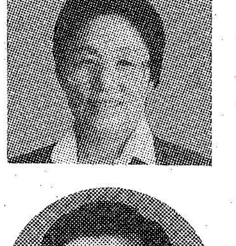
구속 노동자·農民·학생 석방용의는 질문

保安司 체질개선 國防部감독 강화 답변


張慶宇의원


洪英基의원


崔戊龍의원


朴英淑의원

林仁圭의원

24일 사회·문화질문

▲朴英淑의원(평민)＝범죄와의 전쟁선포후 구속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숫자를 밝히고 대통령에게 이들의 석방을 건의할 용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집단시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감시원제도를 도입하고 관계부처의 고위간부들이 정기적으로 문제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노조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제한하라는 노동쟁의지침 마련사실이 있는가.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노사관계질서문란업체로 지정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라.

민영방송의 주식배분비율은 당해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인데 공보처장관이 지배주주 30%,대주주 7%등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공보처의 직권남용이다.

(주)태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여당의원중 주주선정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압력을 가한 의원은 없는가.

▲林仁圭의원(민자)＝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대권의 방향이나 정치적 생명에만 집착하는 「政生문제」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금은 성장위주에서 분배위주로,경제위주에서 정신문화우선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할 전환기다.

3조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내년 문화부예산을 보면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당초요구대로 책정할 용의는 없는가.

인수협의중인 AFKN채널을 민방형태로 허용할 것인지,또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밝히고 법원의 강력사범에 대한 중형선고가 미흡한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시점에서 노조의 정치활동허용이 노동계층의 권익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또 가능한 것인지 견해를 밝혀라.

23일 외교·안보답변

▲姜英勳총리＝북한의 對南적화통일 전략에 변화가 없는 한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불가침선언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토대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자유왕래등 남북한간에 최소한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진 뒤에 불가침선언이 체결돼야 한다. 북한의 불가침선언 제의는 對日수교를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얻기 위한 명분축적용이다. 군축논의에 앞서 반드시 상호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남북고향방문단 상호방문에 대한 절차사항에 합의하고서도 혁명가극단의 공연을 고집하는 것은 고향방문단의 방문 실현을 연기,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

전민련등 개별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치입지 강화를 위해 남북관계개선 범민족대회개최를 운운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소지가 많다. 정부는 이들 사이비단체에 대한 범국민대회 개최를 불허할 방침이다.

정부는 7·7선언에 입각하여 북한·일본 수교에 반대하지 않는다. 북한·일본 수교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단일의석에 의한 유엔가입은 유엔헌장 규정과 상충되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선례도 없다.

북한과 연방의회 연방정부등 연방제안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崔浩中외무장관＝북한의 대남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등 주요우방국이 북한과 수교하면 남북대화와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위에서 韓·美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추가지원을 요청해오면 우리의 능력과 우방국의 입장등을 면밀히 검토,방침을 정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 미국으로부터 파병요청은 없었다.

▲李鍾九국방장관＝보안사 개편방향은 기본임무 수행에 알맞도록 기구를 축소조정하고 요원의 구습·타성제거 자질향상,자질부족자의 과감한 도태및 체질개선을 실현하고 국방부의 지휘감독을 강화토록 하겠다.

89년말 현재 병력은 북한이 우리보다 1.5배 우세하며 전차·함정등 주요전력은 약 2배 앞서고 있다. 전력지수면에서 우리는 89년말 현재 북의 66%수준이며 주한미군까지 포함해도 72%수준으로 열세에 있다.

군사비는 우리가 76년부터 능가해 89년의 경우 북의 1.7배 수준이며 무기구입 장비획득등 전력증가비는 86년부터 우리가 앞섰다.

그러나 북은 62년부터 군비증강을 추진했기 때문에 누계를 하면 우리가 북의 72%수준이다.

북한은 83~89년에 소련의 미그23,29기와 SU25등 전투기 90여대 지대공미사일 50여기,자주포 40여문등 10억달러 상당을 구입했다.